

# 5개 분야 9990개 시설 안전점검

### 전북도, 국가안전대진단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 연기 따라 해빙기 취약시설·봄 행락철 대비·소규모 공공시설 등 대상

전북도가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이나 점검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5개 분야 9,990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매년 2~4월에 예정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에 연기됨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15일 송하진 도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연기되었지만, 방역과 안전이 모두 중요한 만큼 도 자체적인 점검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빙기 취약시설, 개학기 학교주변 위생요인, 봄 행락철 대비, 소규모 공공시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등 5개 분야 9,990개 시설에 대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봄 행락철 대비 출렁다리 등 안전점검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12개소(출렁다리 8, 케이블카 3, 집라인 1)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지난 9일부터 3월 31일까지 53일 동안 총 80여명이 3,216개소(옹벽 14, 사면 11, 산사태 1,906, 급경사지 1,254, 건설현장 19, 문화재 12)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법령에 따라 붕괴, 전도, 낙석 등 우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대규모 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주관하에 합동 점검을 하고, 민간시설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 후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시에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개학기 학교주변 위생요인 안전점검은 2월 22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421개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에 대해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도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38일 동안

2,831개소(소교량 854, 세천 627, 낙차공 18, 취입보 36, 농로 346, 진입로 950)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주변 장애물 현황 등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은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510개소(교량, 터널, 옹벽, 사측 등)를 대상으로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는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26일에 도·시군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안전점검실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연기됐지만, 전북도는 사고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14개 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협정서 체결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전북도청에서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 관광마케팅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북관광협의체'를 구성했다.

'전북관광협의체'는 전북도를 대표 기관으로 하고 14개 시·군을 관련기관으로 해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유명 영향력자 28명(인플루언서)은 시·군별로 발굴된 안전하고 특별한 관광자원을 소재로 작집 시·군을 방문해 취재 후 콘텐츠를 제작해 포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참여하게 될 유명 영향력자는 최소 3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영향력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와 14개 시·군은 유명 영향력자를 활용해 각 시·군을 대표하는 영상 14편과 종합편 1편의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국내외에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전북도청에서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 관광마케팅 협정서를 체결했다.

홍보하게 된다.

이번 콘텐츠는 2040세대를 공략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영상으로 창의적이고 즐거운 스토리텔링 방식을 가미하게 될 예정이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는 도와 14개 시·군의 관광마케팅

협력체계 구축의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와 같은 큰 걸림돌을 시·군과 협력해서 극복하는 해가 될 것이다"며 "관광객의 새로운 욕구에 적극 대응하며, 누구나 전북도에서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 정읍·순창 '최우수'

도, 인구수 8만 이상 그룹 1위 정읍시·2위 김제시·3위 익산시  
인구수 8만 미만 그룹 1위 순창군·2위 임실군·3위 진안군 선정

전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정읍시와 순창군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매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전국기업환경경지도 평가(20%)와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 기업규제 개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등 전북도의 현실에 맞게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구성된 자체평가(80%)로 진행했다.

그 결과 인구수, 제조업체 수 및 산업 규모 등을 고려한 평가대상

▲인구수 8만 이상 그룹에서는 1위 정읍시, 2위 김제시, 3위 익산시 ▲인구수 8만 미만 그룹에서는 1위 순창군, 2위 임실군, 3위 진안군이 각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먼저 인구수 8만 이상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정읍시는 18개 평가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관내 기업 동향 파악, 기업애로해소 전담 창구 설치 및 현장기동반 운영,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실적 등에서 도내 최고득점을 기록했다.

인구수 8만 미만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순창군은 기업 우수사례 발

굴 및 이행실적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각 시·군은 기업애로 전담창구 설치,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운영, 기업과 공무원을 연결해 돕는 기업 후견인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었다. 아울러, 기업지원 우수시책 발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기업규제 애로 사례발굴로 기업지원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이 평가의 큰 성과로 나타났다.

도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시·군에는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총 1억원의 예산으로 각 그룹 1위 2,500만원, 2위 1,500만원, 3위 1,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순항

###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서 신청·접수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농어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며,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새롭게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양봉농가와 어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월 21일 시·군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단지과 포스터 등을 제작해 시·군과 공유하는 등 사업 홍보와 신청에 온 힘을 쏟아 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신청자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도내에 거주하더라도 이 사실을 입

증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민등록 주소가 도내에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속적으로 유지해야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봉농가는 위 자격요건을 갖추고,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토종꿀벌 10군, 서양종꿀벌 30군, 혼합 30군)돼 있으면서 사육자가 도내에 있어야 한다.

어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에 수산업과 관련된 유효한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를 미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한다는지,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내 도(道)외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갔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촌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 둔 농가는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소지인 시에 농지 1,000㎡(300평)

이상을 경작, 주소지 외 시·군에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1만㎡(3,000평) 이상을 경작, 신청년도에 전년도의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을 증명 등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농가, 농지·산지·양봉산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이후에도 적발된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가들은 분야별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단순 보조사업에 그치지 않고, 쾌적한 농어촌으로 개척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국토정보공사, 이중경계 정비사업 업무협약

전북도와 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이하 LX)는 22일 도내 시·군간 불일치한 이중경계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군간 불일치한 이중경계(겹치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한 경계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간정보의 기초자

료인 지적도의 정확도 확보로 토지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정확한 토지정보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경계 정비사업은 겹치거나 벌어지는 이중경계 지역에 대해 시·군간 지적도를 중첩해 경계의 접합 정도를 확인, 항공과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지적측량 또는 무인항공촬영(UAV)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해 지적·임야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전북도는 사업 총괄과 시·군간 조정 등 행정적 지원을, 국토정보공사는 자료조사 및 측량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불일치한 경계 정비에 나선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